

# ‘서울내 9분대’...인천공항~삼성역에 항공택시 띄운다

국토교통부는 4일 제2차 혁신성장전략 회의에서 2025년 상용화 서비스를 목표로 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로드맵(이행안)을 발표했다. 도심항공교통(Uban Air Mobility)은 하늘길 출퇴근을 가능케 할 차세대 모빌리티다.  
 ◇세계 최초 도심항공교통 로드맵 발표...국제표준 선도

비스 실증, 2025년 상용서비스 도입, 2030년 본격 상용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실현해야 할 기본방향으로 △민간주도 사업에 대한 정부지원 △기존 안전·운송제도 틀이 아닌 새로운 제도를 구축 △글로벌 스탠더드 적용으로 선진업체 진출·성장 유도를 제시했다. 국토부는 통신 환경, 기상 조건, 소음의

헬기 운용고도(300~600m)까지 확대해 전자적 비행계획 제출·승인, 비행체-통제센터-관제자 간 비행상황 모니터링·공유가 가능하도록 올해부터 서비스한다. 민간역량 확보를 위해선 도심항공교통 상용화(2025년) 이전, 시험·실증단계에서 규제 없이 비행할 수 있도록 드론법에 따른 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운영할 예정이다.

한국형 실증사업(K-UAM 그랜드챌린지)의 단계적 추진계획에 따라 안전성이 입증된 기체·설비는 실제 운항환경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도심지를 포함한 실증 노선도 지정한다.

핵심부품으로 꼽히는 전기배터리 분야 관련 고출력·고에너지밀도 배터리셀과 배터리패키징 기술, 고속충전기술, 배터리관리시스템(BMS) 개발(2020~2023년)도 추진한다.

제도적으론 도심항공터미널(Vertiport)을 구축할 때 교통유발부담금 일부 감면, 기체 과세표준 마련 및 세제혜택, 기체·충전설비 친환경 보조금 등 경제적 혜택도 마련한다.

이밖에 도서·산간 등 상대적으로 물품배송빈도가 낮은 지역에서 운송서비스를 제공해온 우정사업 분야부터 드론 운송서비스를 우선 활용해 사업성을 확보한다.

◇도심항공용 터미널도 구축... 2040년까지 일자리 16만개·23조 원 경제효과

대규모 자본이 요구되는 도심항공교통용 터미널(Vertiport) 구축에는 민간자본을 조달하거나 기존 빌딩옥상에 구축돼 있고 기준에 적합한 헬리패드 활용을 병행한다.



내년부터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에 도심항공교통이 포함될 수 있도록 복합환승센터 구축·추진계획과도 연계한다.

2023년까지 도심항공교통 서비스지역(도심 내)과 운항거리(30~50km)를 감안해 도심항공교통 운송사업자는 기존 항공 운송사업제도보다 버스·택시에 유사한 운송사업 제도로 마련한다.

올해부터 항공분야의 국제기준을 주도하는 주요 감항당국인 미국 연방항공청(FAA) 및 유럽항공안전청(EASA)과 협정·약정 확대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우선 인천공항~코엑스·삼성역~김포공항을 잇는 도심교통항공을 개발하기로 했다. 오는 2025년부터 도심항공택시가 상용화될 경우 교통혼잡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70%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유력 노선으로 검토 중인 김포공항~잠실역 구간은 경우 이동 소요시간이 승용

차 대비 84% 줄어든다. 서울 시내의 37분에서 9분(76%↓), 수도권은 48분에서 13분(73%↓) 줄어든다.

경제적 파생효과도 크다. 국토부는 도심항공교통 시장 규모가 오는 2040년까지 13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16만명의 일자리 창출, 23조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기대한다. 부가가치도 11조원 이상 발생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도심교통항공 추진을 위해 운항·인프라 등 안전기준부터 운송사업 제도까지 새로운 분야의 교통체계가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상용화 전에 도심항공교통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우선 이달엔 도심항공교통 정책공동체(UAM Team Korea)를 발족하고 도심항공교통 서비스의 실현과 산업발전을 가속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김윤호 기자

## 국토교통부,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로드맵 발표 “2040년까지 일자리 16만개·23조 경제효과” 김현미 장관 “6월 도심항공교통 정책공동체 발족

국토부 관계자는 “도심항공교통은 승용차가 1시간 걸리는 30~50km의 이동거리를 단 20분 만에 도달할 수 있는 혁신적인 교통서비스”라며 “전기동력이라 소음도 일반인의 대화 수준(65dB)이며 탄소 배출도 없어 친환경 교통으로 손꼽힌다”고 말했다. 이어 “확대된 드론이나 헬기 형식이 아닌 날개와 혼용방식으로 비행해 안전성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보잉사 등 글로벌 기업의 도심항공교통 선점전략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8월 미래드론교통담당관을 신설하고 기술위원회를 구성해 이행을 준비해왔다.

도심항공택시 모델 개발을 위해선 한화시스템, 현대자동차, SKT, 대한항공 등 국내 업체와 항공안전기술원, 서울대, 항공대 등이 참여하는 벤처조직도 신설했다. 이행안에선 2024년 도심항공택시 서

사회적 수용성 등 국내 여건에 맞는 한국형 운항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합동 실증사업(K-UAM 그랜드 챌린지, 2022~2024년)을 추진한다.

운항기준(ConOps)은 도심항공교통 운항과 연관되는 공역(고도), 운항대수, 화기 간격, 환승방식 등이 복합적으로 표현되는 개념도와 절차다. 실증사업의 설계와 실행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대표적인 실증사업 선두주자인 미국 NASA와의 협력을 추진한다.

우선 도심항공택시와 같은 신개념 비행체(eVTOL)는 미국·유럽 등의 인증체계를 벤치마킹해 세부 인증기준·절차를 마련하고 국가간 상호인정 확대도 추진한다. 도심항공교통의 교통관리는 한국형 드론교통관리체계(UTM)인 K드론시스템(2017~2022년)을 활용해 단계적으로 구현해나간다.

K드론시스템 운용고도(150m)를 현재



총리 김기회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드라이브 스루’로 달려 환전하고 ATM서 해외송금까지

정부, 2020 외환서비스 혁신방안 혁신 핀테크 막던 규제 허물기...올해 중으로 법령개정

정부가 늦어도 9월부터 환전 외화의 택배 배송과 면세점 수령을 허용한다. 여기에 해외 송금액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인출을 허용하는 등 외환서비스 전반을 혁신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외환서비스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융복합·비대면 외환서비스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환전·송금에 특화된 핀테크 기업의 환전업무 진입을 2017년 무렵부터 허용했으나, 기존 은행과 비교해 업무범위를 과도하게 제한한 측면이 있었다.

특히 환전·송금 서비스의 은행·환전영업자·소액송금업자(증권사나 핀테크)와 위탁을 불허해, 혁신적인 시도가 제한되는 한계를 지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안으로 환전·송금 위탁을 전면 허용하고, 은행과 환전영업자 등이 송금 네트워크를 공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고객이 금융회사, 항공사·면세점·택배업체 등 다양한 경로로 환전을 신청하고,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뜻이다.

이로써 “협업을 통한 융복합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기재부는 강조했다.

앞으로 환전 고객은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출국날 공항에 도착한 이후 항공사 카운터에서 수속과 동시에 달려를 받거나, 면세점 주차장에서 드라이브 스루로 수령, 출국 전날 택배로 수령 등이 가능해진다.

내국인은 물론 한국을 찾은 외국인의 환전 편의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또 해외 송금액을 인근 저축은행·ATM 등 다양한 통로로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그간 증권·카드사 등 소액송금업자는 은행과 달리 자사 플랫폼을 통해서만 고객에게 송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고객이 자택 인근 금융사나 ATM 등에서도 소액송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송금 사무의 위수탁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금껏 온라인으로만 가능했던 소액송금서비스가 가까운 새마을금고, 신협에서 대면으로도 가능해진다.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 ATM에서 외국에서 송금한 원화를 인출할 수도 있다.

정부는 이번 혁신 방안을 올해 중 신속히 시행하며, 유권해석 사항은 즉시 적용하고 시행령·규정(기재부 고시) 개정은 올해 중으로 마무리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혁신적 시도가 융복합·비대면 환전·송금서비스에 집중되고 있으나 진입·영업규제, 위탁불허 등으로 확산에 제약이 있다”며 “이에 신서비스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해 정부 차원에서 기업의 혁신적 실험을 확실히 뒷받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 의류건조기 사면 30만원 환급 국민 3명중 1명에 할인쿠폰

제3차 추경 예산안...고효율 가전 10개 품목 구매 지원 확대

‘씨 보니 신세계’라는 평이 많은 의류건조기. 몇 년째 살까말까 고민했다면 올해가 적기일 수 있겠다.

정부가 의류 건조기를 10% 환급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기에 이달 말부터 2주간 대대적인 국책 판촉행사인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열 예정이다.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등에서 쓸 수 있는 영화 할인쿠폰도 조만간 쏘기로 했다.

할인쿠폰 발행은 오는 9월까지 이어진다. 농수산물·실내체육·외식 등 부문에서 선착순 지급하며, 총 발행규모만 국민 3명 중 1명꼴이다.

10% 할인율을 적용하는 지역상품권 발매도 이어질 예정이다.

◇고효율 가전 환급 확대...한도 30만원으로 늘려

4일 정부가 전달 공개한 2020년도 제3차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을 보면,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시 환급 혜택을 위한 추가 예산이 3000억원 반영됐다.

정부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에너지 고효율 가전제품을 살 때마다 1인 30만원 한도 안에서 구매금액의 10%를 환급해 주고 있다.

아무 가전이나 환급해 주는 것은 아니다.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냉온수기, 진공청소기 등 10개 품목이 대상이다.

이전 추경 당시 1500억원을 배정했는데, 예상보다 시장 반응이 좋아 추가로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대상 가전에는 의류 건조기를 추가했다. 환급 한도가 1인당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렸다.

정부는 구매일 기준 3월23일~12월31일 구입한 제품에 대해 환급을 진행할 계획이다. 신청은 내년 1월15일까지다.

여기에 대중소 유통업체, 전통시장,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6월26일~7월12일 열릴 예정이니, 구매

계획에 참고하면 좋겠다.

◇국민 3명 중 1명꼴 대규모 할인쿠폰... 선착순 지급

정부는 영화 할인쿠폰을 시작으로 △농수산물 △공연 △전시 △숙박 △관광 △체육 △외식 부문에 순차적으로 쿠폰을 발행할 계획이다.

이달 배포 예정인 영화 할인쿠폰은 1인당 6000원이며, 총 147만명에게 제공된다.

7월에는 농수산물 20%(최대 1만원) 할인쿠폰을 600만명에게 제공한다. 공연 1인당 8000원 할인쿠폰도 같은 달 36만명에게 지급한다.

무더위가 예상되는 8월에는 실내체육시설 월 이용권 3만원 환급 혜택을 40만명에게 주기로 했다.

가을에 접어들며 날씨가늘어나는 9월에는 미술관 3000원 할인쿠폰을 160만명에게, 박물관 2000원 할인쿠폰을 190만명에게 발행할 예정이다.

9월에는 온라인 숙박예약을 이용하는 100만명에게 3~4만원 할인율, 주말 외식업체 5회 이용시 1만원 할인을 330만명에게 적용한다.

할인쿠폰 총 발행규모는 1618만명이다. 우리 국민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지역상품권 2~3조 추가, 할인율 10%로...전통시장 이용시 쓸쓸

올해 지역상품권을 구매하면 10% 할인이나 더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액면 금액의 90% 가격에 살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각각 3조원·2조원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6조원에서 9조원(7월 추진), 온누리상품권은 3조원에서 5조원(8월 추진)으로 늘어난다.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기존 5%였던 할인율을 10%로 높였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지역 상점가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는 긴급재난지원금처럼 대형마트, 백화점 등을 제외한 지역 매장이다.